

사회적 부패 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Improvement of Wearable Police Cam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Corrup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김학신(Kim, Hak Shin)**·조정우(Cho, Jeong Woo)***

ABSTRACT

It is said that the world has entere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echnology is converging and data has power. This trend has also brought many changes to the police.

Recently, it has been the global trend to introduce wearable police cams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the USA. In most countries, there is a test period after the introduction of police cams, and then police officers are made to wear the police cams at work.

These wearable police cams are excellent equipment for gathering and securing evidence in crime scenes and traffic accidents, and they are used especially in the case where securing evidence is essential such as assault, robbery, domestic violence, traffic accidents, and chasing suspects. In addition, i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tool to prevent the abuse of the authority of the police, resolve the conflicts among citizens, police officers, and criminal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citizens. According to this trend, it is necessary to use wearable police cams in the field of our police activities. Especially, it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illegal acts such as abuse of authority by police officers that may occur during public service and ensuring human rights of the people to the maximum extent.

Proper use of wearable police cams by the police can eventually gain more trust from the public, and in addition, can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in policing activities.

Under the recognition of this importance, this study presented various problems of using wearable police cams in the field and ways for improvements.

Key words: Wearable Police Cam, Body Camera, Privacy, Evidence, Due Process of Law

* 2016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실태 분석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보고서”, 게재된 내용을 2020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기간 종료에 따라 재구성 하였음.

**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법학박사

***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는 말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의 옷에 부착된 영상 및 음성 촬영 및 저장이 가능한 소형 장치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공권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동시에 범죄현장에서 중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하여 적극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찰의 공권력 통제 및 증거의 확보가 중요한 폭행, 강도, 가정폭력, 교통사고, 피의자 추적 등 범죄현장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을 도입하고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 외부에 부착된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을 실시간 촬영하여 저장하게 됨으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방지는 물론이며 시민과 경찰, 범죄자 등 서로간의 마찰과 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입각하여 우리 경찰 활동분야에서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은 부패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에 의한 공권력 남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2015년 10월 경찰청은 훈령으로 「웨어러블 폴리스 캠(Wearable Police Cam)¹⁾ 시스템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하였다.²⁾

그러나 현재 일선 경찰서와 경찰서 관할 지구대를 중심으로 보급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2020년 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부족 및 운용장비의 성능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아³⁾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한 영상촬영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1)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부르는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바디 캠(body cam),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바디 worn 카메라(body-worn camera), 온 바디 카메라(on-body camera), 웨어러블 카메라(wearable camera), 바디 마운티드 카메라(body-mounted camera) 등 경찰관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2) 경찰청 훈령 제778호(2015. 10. 19)로 제정 되었으며,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폴리스캠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시 그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경찰관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본 규칙의 제정 이유이다.

3) 문화일보, “강남署 폴리스캠 0진.. 영상증거 관리 구멍”, 2019.10.2.

경찰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인 수집요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장없이 촬영한 영상촬영의 증거능력 및 보관된 영상정보의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현장경찰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올바른 활용은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의의 및 도입 배경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용어 정의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에 부착하여 경찰관이 보고 듣는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이동식 소형 카메라⁴⁾는 각 국가마다 부착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고, 사용의 목적도 경찰활동의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영미국가에서는 바디 카메라(Body Camera)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나, 바디 원 카메라(Body-Worn Camera:BWC), 온 바디 카메라(On-Body Camera), 웨어러블 카메라(Wearable Camera), 바디 마운티드 카메라(Body-Mounted Camera), 단추구멍 카메라(Cameras à la boutonnière), 보행 카메라(Cameras Piétons), 신체카메라(Körperkamera), 어깨카메라(Schulterkamera), 우리 경찰에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등 각 국가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다.

현재 전 세계에 다양한 종류의 신체 부착 카메라가 개발되어 시판 중이고, 그 종류에 따라 머리나 헬멧, 안경, 제복주머니나 배지 등에 탈부착 할 수 있는 기기가 이용되고 있다.⁵⁾ 이에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에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는 기기가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성 있는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으로 사용하고 있

4) White, M., 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4), p.12; 남궁 현,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3호, 2014, 31-32면 재인용.

5)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 Primer on Body-Worn Cameras for Law Enforcement (Washington DC, 2014), p.5; 남궁 현, 앞의 논문, 32면 재인용.

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첫째,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야간의 녹화 기능을 포함한다. 둘째,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⁶⁾ 셋째,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녹화 시야각 120도 이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시야각은 약 120도 이다. 물론 시야각의 수치가 클수록 더욱더 넓은 화면을 폴리스 캠에 녹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야각이 넓을 경우에는 화면이 왜곡되고 주변부의 화질이 저하될 수도 있어 적절한 시야각은 110도 - 130도이다. 넷째,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액정표시장치를 통한 영상기록 재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인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다던가, 무선으로 영상을 전송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2.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 배경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과 더불어 민생치안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3년 10월 - 12월 중 치안부분 행정자치부 'U-서비스 지원 사업'의 과제발굴 위원회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후 2014. 2. 28 행정자치부 'U-서비스 지원사업' 과제발굴위원회에서 치안분야 과제료 「웨어러블(Wearable) 동영상 촬영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이후, 2014. 10 웨어러블 카메라 사업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⁷⁾ 그리고 경찰청 내부 8,191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⁸⁾ 등을 거쳐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⁹⁾

최근까지 이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제공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기

6) 여기서 FullHD급 이라 함은 화면을 구성할 때 점 같은 최소 단위인 화소를 순차적으로 보내주는 것을 주사라고 하는데, 이런 주사선이 가로 1920선, 세로 1080선을 곱해서 화면을 빈틈 없이 꽉 채워주는 화질을 말한다.

7)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에 따른 법적 검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행정 작용으로서 위험방지활동이며, 범죄수사(강제수사)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8) 2015년 6월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찰관 대상 8,191명이 참여하여 97%가 찬성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9) 2014. 11 '웨어러블(Wearable) 동영상 촬영 시스템' 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기획재정부는 행정자치부의 'U-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배정을 통해 '웨어러블(Wearable) 동영상 촬영 시스템' 사업 8.05억을 배정하였다.

존에 지급된 유사 장비 및 시장에 시판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보다 사용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부진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상 및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배터리 용량 부족,¹⁰⁾ 전원을 켜는데 시간이 걸려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이 곤란하거나, 업로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 사항 등의 사용상 문제와 증거 제출 시 관련 부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가 필요하고, 입출고 절차의 복잡, 절차상 모든 영상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경찰관이 사용 자체를 꺼려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또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모든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 증거 등 필요한 영상만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맞게 관련 훈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경찰서에 배치하는 형태로 시범운영 방식을 전환하였고, 이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적극 활용과 이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치안환경이 복잡한 서울경찰청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 배치하였으나,¹¹⁾ 이마저도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0월 경찰청이 행안위에 제출한 “폴리스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폴리스캠 촬영물 등록 및 수사·재판에 제공한 현황은 0건으로 폴리스캠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신 경찰관 개인소유의 폴리스캠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영상증거에 대한 보관 및 활용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¹²⁾

Ⅲ. 외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용 실태

1. 미국

현재 미국은 매년 130만 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에 노출됨과 함께 경찰관에 의한 범죄자의 과잉 진압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10) 미국 시카고 경찰의 경우, 착용하게 될 웨어러블 카메라는 한번 충전으로 72시간 촬영할 수 있고 고화질로 음성·영상이 모두 기록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11572 (2019. 10. 10. 검색).

11)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16. 5,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대한 통계가 없고, 활용에 있어서도 현장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착용을 꺼려하는 분위기이며, 그 결과 2016. 7. 1 기준으로 재배치하였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의 행동이나 행태가 녹화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또한 제약이 되고 있고, 특히, 사용상 문제 발생시 시스템 로그 등 감찰의 요구도 경찰관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위축되고 있다.

12) 최미경·최정민,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590호, 2019, 6, 30. 참조.

다. 2014년 8월은 미국 미주리주 퍼저슨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진압의 논란 소지를 줄이고, 순찰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취지로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의 카운티·시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¹³⁾

이러한 흐름은 경찰관이 부착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경찰과 시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기로 미국인들은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2014. 12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을 확대 발표하고, 이를 위해 T/F를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도 승인하였다. 미국은 2020년 현재 23개 주¹⁴⁾에서 자체적으로 폴리스 캠의 운영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다.¹⁵⁾

미국은 경찰복(넥타이, 옷깃 등)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교통단속, 범인검거 등 경찰의 외근활동 상황에서 수집된 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으로 미국 전체 경찰청 중 1/3정도가 도입하고 있다.

2. 호주

호주의 NSW(New South Wales Police Force) 주 경찰청은 경찰활동 장비로 신체부착용 영상녹화기(Body Worn Video, BWV)를 도입하였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BWV를 이용하여 공공장소 또는 개인적인 상황을 촬영하고 있으며, 경찰의 업무집행용 장비로써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된다. 경찰활동의 일환인 직무집행시, 일반 시민과의 대화 혹은 범죄사건의 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13)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 북동부 샌버나디노 카운티(San Bernardino County)의 리알토(Rialto)시에서 바디 캠(Body Cam)을 도입하여 경찰관 120명에게 폴리스 캠을 부착한 후, 경찰서장은 바디 캠을 활용한 사건 및 사고 발생 건수의 증감(増減)을 실험하였는데, 그 결과 2012년 폴리스 캠을 도입하여 사용한 후부터 경찰관에 대한 민원이 크게 감소됨을 보여 주었다. 즉,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도입 후, 경찰관에 대한 불평민원 신고가 감소하였고,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 이전과 비교해서 시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불평 민원 신고가 87.5%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관이 법집행을 위해서 경찰 무력 사용은 절반 이상인 59%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샌디에이고(San Diego)의 경우에도 2015년에 40%가 감소하였고, 경찰관이 법집행을 위해서 경찰 무력을 사용한 것은 절반 이상인 46%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https://estima.wordpress.com\(2020. 5. 10. 검색\)](https://estima.wordpress.com(2020. 5. 10. 검색)).

14) Washington, Oregon, California, Nevada, Texas, North Dakota, Minnesota, Utah, Oklahoma, Illinois, Missouri, Kansas, Louisiana, Indiana, Tennessee, Michigan, Pennsylvan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Florida, New Hampshire, Connecticut 등 바디캠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디캠의 운용장비의 성능 및 음성저장 영상저장에 대한 기준 및 정보 공개에 관하여 주 법에 명시하여 운용하고 있다.

15) <https://www.ncsl.org/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body-worn-cameras-interactive-graphic.aspx#/> (2020.5. 10. 검색).

호주의 NSWPF(New South Wales Police Force) 주 경찰청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시범 활용하고자, 2015년 9월 17일부터 산하 76개 경찰서 중 Eastern Beach LAC(Local Area Command) 지역경찰 등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운영하였다. 이는 2014. 5 신체 부착 카메라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약 400만 달러(한화 약 35억원)를 투입하여 NSWPF의 일선 경찰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호주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사법절차에 필요한 증거확보 및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불필요한 저항을 억제하고 경찰관의 적법하고 정확한 초동 조치를 유도하여 범죄 현장의 증거확보 등 다양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 및 상대방의 불필요한 폭력, 긴장 억제로 상호 부상 방지, 경찰관의 초동조치 부실, 시민들의 공무방해 행위의 논란에 따른 입증 자료 확보, 범죄 수사 활용 및 법원의 재판에서 증거의 보강 자료, 경찰관 및 상대방의 대응 행태를 분석하여 경찰관 교육훈련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BWV)을 통해 촬영된 녹화물을 감시장치법(Surveillance Devices Act 2007)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여 영상 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웨어러블 폴리스캠(BWV)으로 촬영된 영상 녹화물을 불법적으로 사용, 전달, 유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¹⁶⁾. NSW 주(州) 경찰청은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를 의무적으로 철저히 하여 합법적인 영상촬영 절차에 의해 치안 유지 활동 및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2014년 10월에 ‘감시카메라 및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 보호 규정집(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는 CCTV를 비롯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드론, 헬리캠,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등 새롭게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감시활동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¹⁷⁾

이 법률 제정과 함께 경찰관의 외근업무 활동 시 사건의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 교통단속 등 경찰행동 억제를 위해 부착형 소형카메라를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16) 이와 관련된 법률은 State Records Act 1988,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988,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Access) Act 2009 이다.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Research(2019. 12. 12. 검색).

17)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2>(2019. 12. 12. 검색).

특히, 영국은 테이저사(Taser)에서 제작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폴리스캠 사용으로 경찰 폭력에 대한 불만이 87.5%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16년 10월 17일 영국의 런던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2만2천명 이상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body-worn video)을 지급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⁸⁾

런던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험 운용한 결과 피해자들을 위한 증거 수집을 신속하게 하고, 특히 폭력 사건들에서 자신의 행동이 촬영된 것을 안 가해자들로부터 범행 인정이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¹⁹⁾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Cambridge University)이 2014년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한 경찰들에 대한 불만의 제기 건수가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IV.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의 법률적 쟁점

1. 헌법상 사생활 침해 문제

현대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보장이 요구되고 있다.²¹⁾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²²⁾

18) <http://arstechnica.co.uk/tech-policy/2016/10/body-cams-taser-london-police-rollout/> (2019.12.12 검색).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759318> (2019. 12. 12 검색).

20)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sep/29/police-with-body-cameras-receive-93-fewer-complaints-study> (2019. 12. 12 검색).

21) 金哲洙, 『憲法學新論(第20全訂新版)』, 博英社, 2010, 666면.

22)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 헌마 518, 헌재판례집 제15권 2집(하), 185면 이하(206-207면); 헌재

특히,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Privacy)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²³⁾

이처럼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²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에 따른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즉,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이용한 영상촬영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²⁵⁾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현재 경찰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촬영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촬영대상자의 단순 동의에 의해서만 촬영을 한다면, 차후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청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2. 형사법상 적법절차의 문제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목적의 사진 촬영 및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영상기록에 대한 법률적 촬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르면, 폴리스캠의 사용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 및

2008. 4. 24. 선고, 2006 헌마 402·531(병합), 헌재판례집 제20권 1집(상), 674면 이하(680면).

23) 헌재 2005. 5. 26. 선고, 99 헌마, 513, 2004 헌마 190(병합), 헌재판례집 제17권 1집, 668면 이하).

24) 헌재 2005. 7. 21. 2003 헌마 282, 헌재판례집 17-2, 81, 90; 헌재 2008. 10. 30. 선고, 2006 헌마 1401·1409(병합), 헌재판례집 제20권 2집(상), 1089면 이하 참조.

25) 대판 1996. 8. 20. 94 다 29928, 공보 1996, 2776 이하; 대판 1998. 7. 24. 96 다 42789 판례 참조.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

또한 대법원 판례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²⁷⁾라고 판단하여 영상촬영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활용에 대한 적법절차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차후 적법한 절차 문제와 외부적인 법적 근거 제시에는 법률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촬영 방법에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²⁸⁾은 소위 육안 관찰의 법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²⁹⁾ 육안관찰의 법리란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기술적 장치의 도움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영장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은 육안관찰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위 판례에 근거하면 영장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 능력 문제

현재까지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법원의 증거로 제시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는 아직까지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위해 이와 유사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증거라면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 모두 무결성 및 동일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피의자 등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여야 한다. 이때 서명, 봉인 과정을 녹화하며, 압수 대상자가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통합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별도의 저장장치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의 분석 작업을 실시하며, 압수한 저장매체에 쓰기방지 장치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을 실시하고,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해쉬값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 날인하게 한다. 이때 피의자 등이 법정에서 무결성을 부정하는 경우, 압

26)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시행 2015. 10. 19.), 제6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 범위 참조.

27) 대법원 판례 99도 2317.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 판례 참조.

28) 대법원 판례 99도 2317.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 판례 참조.

2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5, 1332면.

수한 저장장치의 해쉬값과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하도록 법원에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³⁰⁾

위의 디지털 증거의 절차에 따르면,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문제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기록 증거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영상기록 증거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의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후, 경찰관은 위의 영상기록 증거물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그러나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기록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영상기록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기록 증거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영상기록 증거물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기록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기록 증거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기록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증거처럼 법정으로 제출하는 과정에 반드시 무결성과 동일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³¹⁾ 즉, 동일성이란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이 법원에 제출되

30)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 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형사판례연구(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516-517면.

31)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었을 경우,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무결성이란 촬영된 영상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사적으로 경찰관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경우 저장된 영상을 저장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강력(살인)사건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 기록 보존 문제

2015. 10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제12조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3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2015. 7. 24.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³²⁾ 즉, 형사소송법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현행 25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 살인 사건과 관련이 된 영상이라면 실제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상은 무기한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³³⁾

따라서 살인사건과 같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아니한 범죄들을 위해서는 현행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과 관련된 법률 제정 시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0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32)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태완 군은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으며, 태완 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돼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따라서 태완이법은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되므로, 공소 시효가 만료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3)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2014, pp15-16.

5.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영상 보존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현행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의하면, 경찰청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통하여 수집된 촬영 영상을 보존 할 수 있는 것은 30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신중을 기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 수집된 영상 기록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하여 촬영 수집된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데이터 저장 능력 및 비용 등의 다른 요인과 함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현행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보다는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장된 영상의 무결성과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유사하게 있는 내용이다.

첫째, 데이터 변조, 편집, 복사 금지를 명시 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관이 수집된 영상에 대하여 서버로 전송하기 전 변경하거나 녹음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감사시스템을 통하여 촬영 영상 데이터에 접근하여 열람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하고, 백업시스템에는 영상기록 뿐만 아니라 로그 기록도 함께 저장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³⁴⁾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영상에 기록된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거를 보존하는데 있어 촬영된 영상 데이터 조작의혹 등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³⁵⁾

보존기간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일반적으로 증거 또는 비증거로 분류하여, 보존기간을 다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영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영상으로는 범죄, 체포과정에서의 경찰관과의 대치 등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한다. 특히, 살인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는 무기한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몇 달간 보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³⁶⁾

34)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2014, pp15-16.

35) Ibid, pp15-16.

36) Ibid, pp15-16.

V.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따른 실효적 개선 방안

1.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자료의 보관 및 관리 개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제12조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3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기록들이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고, 차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범죄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 피의자, 경찰관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기록을 30일간만 보관하도록 한 위 규칙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법시스템으로 보아서도 30일안에 범죄 사건들이 종결되는 경우가 흔치 않을 뿐더러 영상기록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CD나 DVD 등을 이용하여 증거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를 보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상기록을 30일간 보관할 수 있는 규정도 중요한 범죄의 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이 된다면, 30일 이상으로 충분한 여유 시간동안 영상기록을 보관 할 수 있도록 동 운영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보존기간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일반적으로 증거 또는 비증거로 분류하여, 보존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거영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영상으로는 범죄, 체포과정에서 경찰관과의 대치 등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특히, 살인 사건과 관련된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영상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³⁷⁾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촬영된 영상의 보존정책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보존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는 우리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과는 다르게 저장된 영상의 보존기간이 다르다.

즉, 특정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영상기록물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각 주(州)별로 보존기간에 차이가 있다. 노스타코타 주(州)³⁸⁾는 14일, 뉴올리언스 주(州)³⁹⁾는 2년 까지 보존하는 차이가 난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주의 경우 살인은 7년까지 보존하며, 경범죄는 1년, 무력행사

37) Ibid, pp15-16.

38) Grand Forks Police Department, "Directive: Body-Worn Camera Recording Equipment," Grand Forks Herald, revised November 26, 2014, p. 3, accessed January 14, 2015, <http://www.grandforksherald.com/sites/default/files/4113.pdf> (2020. 5. 2. 검색).

39) New Orleans Police Department, "New Orleans Police Department Policy Manual, Body-Worn Camera Policy 447," p. 8, accessed January 14, 2015, <http://www.fopno.com/uploads/files/Policy%20447%20-%20PR447%20-%20Body%20Worn%20Camera%20EFF%203-30-14.pdf>. (2020. 5. 2. 검색).

는 90일 까지 보관하게 되어있다.⁴⁰⁾ 따라서 현행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 규칙을 세워 미국처럼 보존기간을 달리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웨어러블 폴리스캠 기기 선택 기준의 개선

현재 우리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폴리스캠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폴리스캠 기기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보안을 이유로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기기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은 경찰기관으로서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보안상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폴리스캠의 기계적인 결함이나 녹화시 고화질의 촬영 영상, 저장 용량의 증가 등 기계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현실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통한 영상 촬영보다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 대신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⁴¹⁾

이러한 현실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부착형 카메라 중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폴리스캠의 기계적인 결함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 그 활용성 측면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경찰관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염려 등의 보안문제는 따로 보안에 관한 분야만 경찰청과 기계 업체와의 협의 하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차후 우리 경찰에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기기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면 선택의 기준을 폭넓은 시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 범위 개선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첫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 3의 긴급체포, 제201조의 구속,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 체포로서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촬영할

40)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GO-009-14 Supp No 2, Aug. 28, 2014," accessed December 30, 2014, p. 2, <https://static.spokanecity.org/documents/police/accountability/bodycamera/las-vegas-policy.pdf>. (2020. 5. 2. 검색).

41) <https://www.nocutnews.co.kr/news/5166993> (2020. 5. 10. 검색).

수 있다.

둘째,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있을 때 촬영할 수 있다.

셋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①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②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③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에 촬영을 할 수 있다.

넷째, 피녹화자로 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의하면, 촬영 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할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 도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상황 판단에 근거하여 촬영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다양한 촬영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차후 다양한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여 명확한 촬영범위를 현장 경찰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준다면,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촬영 범위에 관한 선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따른 불심검문, 집회·시위 현장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⁴²⁾ 그러나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촬영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충분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4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14. 4. 9. 결정 참고.

4.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시스템의 실용적인 개선 방안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현장에서 폴리스캠을 착용하는 경찰관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보통 폴리스캠 관리책임자나 담당 경찰관이 사용법을 교육 받은 후, 전수하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기 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 내용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관리책임자는 폴리스캠 사용자에게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 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법 정도 이외에는 영상촬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례나 이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나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폴리스캠 영상 촬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폴리스캠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관리책임자가 교육 훈련을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폴리스캠이 활성화 된다는 전제하에 중앙경찰학교의 신입경찰관 교육과정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 과목을 개설한다면, 따로 경찰관서에서 교육 훈련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앙경찰학교에 과목이 개설이 된다면, 앞으로 폴리스캠을 사용할 신입 경찰관들에게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국내외 관련 판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개혁은 결국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을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선진국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많은 예산을 치안확보의 일환으로 폴리스캠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⁴³⁾ 예를 들면, 2014년 12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경찰의 치안

43) 예를 들면, 미국의 경찰국에서는 약 800 달러에서 1200 달러 수준의 폴리스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초기 구입 비용 이외에, 배터리 교환이나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예컨대, 미국의 한 경찰국의 경우 900대의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약 67,500 달러를 지불하였고, 2년 동안 영상을 저장하는데 약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면서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2억 63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의 예산 중, 폴리스캠 5만 대 추가 확보에 7500만 달러(한화 약 855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는 지방정부에는 전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미국의 13개 주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폴리스캠 지원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제도를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면, 법무지원국(BJA)에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42개주의 285곳의 경찰서에 폴리스캠 사업을 지원하였다.⁴⁵⁾

이러한 선진국의 폴리스캠 확대 추세에 비하면, 우리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은 시범으로 끝나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 사업 이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우리 경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아쉽게 최근까지 예산반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사업은 중요하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선진국에 걸맞게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폴리스캠이 국내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예산 반영이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지금 세계는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경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급속도로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모든 범죄나 교통사고 등의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훌륭한 그리고 유용한 장비이고, 경찰과 시민 및 범죄자들과의 마찰과 충돌을 해결하면서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중 폴리스캠을 신체에 부착하여 영상을 기록함으로써 공무를

111,000 달러(한화 약 1억 1,600만원)를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같은 수치를 보면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 지출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40%에 가까운 경찰국에서 폴리스캠을 도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비용 문제를 거론했을 정도이다.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Recommendations and Lessons Learned (Washington, DC, 2014), p. 32; 남궁 현, 앞의 글, 44면, 재인용.

4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08742(2019. 10. 18 검색).

45) 경찰관의 바디캠 구입을 위하여 2015년 법무지원국(BJA, Bureau of Justice Assistance)에서는 주 및 지방경찰서에 2,2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집행할 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폴리스캠을 착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경찰관들에 의한 폴리스캠의 올바른 활용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본 논문은 경찰청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실은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일반 전문 신체 부착 카메라 회사에서 시판중인 부착형 카메라의 기술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대등하게 현재 우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도 새롭고 필요한 기능을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신체 부착 카메라 전문회사에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에 의해 개발·연구되어 시판되고 있는 신체 부착 카메라를 폴리스캠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하고 있다.

즉, 부착형 카메라를 제작하는 전문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bluetooth)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안도 제시하였다. 경찰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걸음씩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반드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이 되리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I. 국내외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14. 4. 9. 결정.
-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 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형사판례연구(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 金哲洙, 『憲法學新論(第)20全訂新版』, 博英社, 2010.
- 남궁 현,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3호, 2014.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5.
- 주프랑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프랑스 경찰자료, 경찰청.
-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Recommendations and Lessons Learned (Washington, DC, 2014).
- Grand Forks Police Department, “Directive: Body-Worn Camera Recording Equipment,” Grand Forks Herald, revised November 26, 2014.
-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GO-009-14 Supp No 2, Aug. 28, 2014,” accessed December 30, 2014.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 Primer on Body-Worn Cameras for Law Enforcement (Washington DC, 2014).
- New Orleans Police Department, “New Orleans Police Department Policy Manual, Body-Worn Camera Policy 447. accessed January 14, 2015.
- White, M., 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4.

II. 판례 및 기타

-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 헌마 518, 헌재판례집 제15권 2집.
- 헌재 2008. 4. 24. 선고, 2006 헌마 402·531(병합), 헌재판례집 제20권 1집.
- 헌재 2005. 5. 26. 선고, 99 헌마, 513, 2004 헌마 190(병합), 헌재판례집 제17권 1집.
- 헌재 2005. 7. 21. 2003 헌마 282, 헌재판례집 17-2.
- 헌재 2008. 10. 30. 선고, 2006 헌마 1401·1409(병합), 헌재판례집 제20권 2집.
- 대법원판례 1996. 8. 20, 94 다 29928, 공보 1996.
- 대법원판례 1998. 7. 24, 96 다 42789.
- 대법원판례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대법원판례 99도 2317.
- 대법원판례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11572

<http://estima.wordpress.co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17919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Introduction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Research.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2>(2017. 10. 23 검색).

<http://arstechnica.co.uk/tech-policy/2016/10/body-cams-taser-london-police-rollou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759318>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sep/29/police-with-body-cameras-receive-93-fewer-complaints-study>

<http://www.grandforksherald.com/sites/default/files/4113.pdf>

<http://www.fopno.com/uploads/files/Policy%20447%20-%20PR447%20-%20Body%20Worn%20Camera%20EFF%203-30-14.pdf>.

<https://static.spokanecity.org/documents/police/accountability/bodycamera/las-vegas-policy.pdf>.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08742

투고일자 : 2020. 06. 11

수정일자 : 2020. 06. 15

게재일자 : 2020. 06. 30

<국문초록>

사회적 부패 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학신 · 조정우

지금 세계는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경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들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폴리스캠 도입에 따른 시범운영을 거친 이후, 현장 경찰관들에게 폴리스캠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러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범죄나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장비이며, 특히 범죄현장에서 범죄 증거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폭행, 강도, 가정폭력, 교통사고, 피의자 추적 사건 등에 활용 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방지, 시민과 경찰, 범죄자 등 서로간의 마찰과 충돌을 해결하면서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경찰 활동분야에서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은 필요하다. 특히,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에 의한 공권력 남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의 공권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범죄예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취폭력자들이 경찰관서, 구청,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난입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등의 주취 난동행위에 있어서도 폴리스캠의 활용성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경찰관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올바른 활용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 아래 본 논문은 지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에 따른 현장의 여러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바디 카메라(Body Camera), 프라이버시, 증거, 적법절차